

2026년
4호

KPF 미디어브리프

K P F Media Brief Webzine

청소년 SNS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실행 조건

진민정 |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 해외 청소년 SNS 규제, '이용 통제'에서 '플랫폼 설계 책임'으로 전환
- ✓ 2026년 미국 판결, 중독적 플랫폼 구조에 대한 법적 책임 부각
- ✓ 캘리포니아, 설계→알고리즘→접근 제한으로 단계적 규제 확대
- ✓ 브라질,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금지 등 '중독성 설계' 직접 규제 도입
- ✓ 유럽·영국·호주, 연령 기준·위험관리·접근 통제 결합한 정책 확산
- ✓ 향후 과제는 플랫폼 설계 규제를 실제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실행 조건의 확보



최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정책 의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으며, 브라질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기능을 금지하는 등 이용을 유도하는 설계 요소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유럽과 호주에서도 연령 제한과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확산되면서, 각국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청소년 SNS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수단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흐름은 분명하다. 청소년 SNS 문제를 개인의 이용 습관이 아니라 플랫폼이 설계한 환경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전환은 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 입법 방향: ‘이용 문제’에서 ‘설계 책임’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최근 뚜렷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도한 이용을 개인의 자기조절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플랫폼의 설계 구조가 이용 행태를 유도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의 초점이 사용자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적 콘텐츠와 유해한 온라인 환경에 장기간 노출시켜 정신건강 피해를 초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플랫폼 이용에 깊이 몰입한 이용자의 우울감, 자살 충동, 외모 불안 등이 심화되었다는 증언이 제시되었으며, 배심원단은 이러한 피해와 플랫폼 설계 구조 간의 연관성을 인정했다¹⁾.

특히 이 사건에서 부각된 것은 개별 콘텐츠의 유해성을 넘어, 이용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플랫폼 구조였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상시 알림과 같은 기능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장치이며, 청소년에게는 이용 중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청소년 SNS 문제를 ‘얼마나 이용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용 시간과 노출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림 1 SNS 중독 책임 관련 판결을 듣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부모와 가족들



출처: 게티이미지

1) Le Monde (2026.03.27.) Les dangers des réseaux sociaux enfin reconnus par la justice,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6/03/27/les-dangers-des-reseaux-sociaux-enfin-reconnus-par-la-justice_6674502_3232.html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 연구 축적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특히 2021년 공개된 「페이스북 파일(Facebook Files)」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플랫폼 내부 연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특히 10대 여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내부 자료에는 ‘신체 이미지에 불만을 느끼는 10대 여학생의 약 3명 중 1명이 인스타그램 사용 이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일부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 충동 증가와의 연관성도 제시되어 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설계 개선이나 알고리즘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용 증가를 유도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플랫폼 책임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캘리포니아: 설계 규제에서 접근 제한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

이러한 전환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곳이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는 단일 법안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규제 장치를 단계적으로 축적하면서 하나의 정책 흐름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입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화와 플랫폼 책임 논쟁의 확대가 자리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학부모 단체, 정치권의 압력이 결합되며 규제 필요성이 빠르게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출발점은 2022년 제정된 「연령 적합 설계 규약법(AB 2273)」이다. 이 법은 플랫폼이 아동 이용 가능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평가하고, 기본 설정을 아동 보호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즉 사후 규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접근(by design)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중심 규제는 곧바로 헌법적 논쟁에 직면했다. 기술기업 단체(NetChoice 등)는 해당 법이 플랫폼의 콘텐츠 노출과 설계 방식에 영향을 미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 전반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일부 조항의 위헌 가능성과 규제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법의 효력은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연령 추정 및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PIA)는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기업 부담 증가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³⁾ 이는 설계 규제가 정책적으로는 진전된 접근이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2024년 제정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법(SB 976)」은 규제의 초점을 한 단계 이동시킨다. 이 법은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 개념을 도입해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를 직접 규제 대

2) Wells, G., Horwitz, J., & Seetharaman, D. (2021). Facebook Knows Instagram Is Toxic for Teen Girls, Company Documents Show, <https://www.wsj.com/tech/personal-tech/facebook-knows-instagram-is-toxic-for-teen-girls-company-documents-show-11631620739>

3) Maas, N., & Ramirez, B. (2025.03.15). District court enjoins enforcement of the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Inside Privacy. <https://www.insideprivacy.com/childrens-privacy/district-court-enjoins-enforcement-of-the-california-age-appropriate-design-code-act/>

상으로 설정하고,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개인화된 추천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규제
의 중심이 콘텐츠에서 플랫폼 설계, 나아가 이용 구조 자체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규제 역시 표현의 자유, 기술적 복잡성, 실효성 문제와 충돌하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따라 정책은 다시 한 번 방향을 전환한다.

그림 2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SNS 규제: 단계적 변화



본 그림은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임.

2026년 2월 발의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안(AB 1709)」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
지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플랫폼 내부의 설계나 추천 방식을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플
랫폼 접근 권한 자체를 정책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전 단계와 구별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계와 알고리즘 규제가 플랫폼 내부 구
조에 대한 간접적 개입이었다면, 접근 제한은 위험 노출 이전 단계에서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보다 직접적
인 규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기술적 설계나 알고리즘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기
술적 논쟁을 고려할 때, 연령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
될 여지도 있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설계 규제에서 알고리즘 규제, 다시 접근 제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해 왔다. 이는 단선적인 규제 강화라기보다, 법적 제약과 정책 효
과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산업 혁신과의 충돌을 동반하며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지속적
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
장해 왔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는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최근 판결에서 플랫폼의 설계 구조와 청소년 피해 간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되면서, 이러한 정책 접근은 단순한 규제 실험을 넘어 일정한 정책적·법적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입법과 사법 간 긴장 관계 속에서 정책 방향 역시 계속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 글로벌 동향: 플랫폼 규제의 확장과 새로운 접근

캘리포니아 외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연령 기준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26년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 법안」을 통해 계정 개설 제한과 연령 확인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전면 금지 방식은 수정되어, 청소년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그 외 서비스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수정은 EU 법질서와 표현의 자유,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의 충돌을 고려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간 균형을 모색한 결과로 평가된다.⁴⁾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통해 플랫폼의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위험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연령 제한보다는 연령 확인과 알고리즘 위험 관리 등 플랫폼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호주는 「2024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소셜미디어 최소 연령)」을 통과시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지를 제한하고, 플랫폼에 강한 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 청소년이 비공식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국가별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연령 기준 설정, 플랫폼 책임 강화, 접근 통제가 결합된 형태로 규제가 전개되고 있다.⁵⁾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국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랫폼 설계와 수익 구조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이다.

2026년 브라질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아동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제 틀을 도입했다. 동시에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기능을 금지함으로써, 이

4) Tual, M. (2026.03.31.) Interdiction des réseaux sociaux aux moins de 15 ans : le texte remanié par le Sénat. https://www.lemonde.fr/pixels/article/2026/03/31/interdiction-des-reseaux-sociaux-aux-moins-de-15-ans-le-texte-remanie-par-le-senat_6675699_4408996.html

5) Thubron, R. (2026.04.13.). Australia's social media ban for kids mostly isn't working, research suggests, <https://www.techspot.com/news/112049-australia-social-media-ban-kids-mostly-isnt-working.html>

용 시간을 늘리고 몰입을 유도하는 핵심 설계 요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⁶⁾

기존 규제가 이용 행태나 접근 권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브라질의 접근은 이용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데이터 활용 방식, 수익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은 이용자의 선택 이전에 소비를 연장시키는 설계 장치라는 점에서, 이 법은 ‘중독성 설계(addictive design)’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 사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이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 · 알고리즘 · 광고 · 콘텐츠 생산 구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청소년 SNS 규제, ‘환경 설계’ 이후의 과제

이처럼 청소년 SNS 규제는 이용 행태를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을 유도하는 환경과 구조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설계와 알고리즘, 접근 권한을 단계적으로 규제해 온 반면, 브라질은 인터페이스, 광고, 콘텐츠 생산 구조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설계와 알고리즘, 인터페이스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 기준의 모호성은 곧바로 사법적 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설계를 ‘유해한 구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핵심 쟁점이다.

둘째, 연령 기반 접근 제한과 광고 규제는 필연적으로 연령 확인과 데이터 활용 문제를 수반한다. 이는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긴장을 발생시키며, 규제 설계 과정에서 기술적 집행 가능성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셋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와 수익 구조까지 규제하는 접근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브라질 사례에서처럼 ‘중독성 설계’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큰 만큼, 혁신 저해 논란과 정책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소년 SNS 규제의 성패는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규제가 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은 규제 방식의 정교함뿐 아니라,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주요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 포함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논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실행 가능한 규제 설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6) Brasil, M., & Martins, L. (2026, 03.19) Brazil Bans Infinite Scroll and Autoplay for Children on Social Media, <https://www1.folha.uol.com.br/internacional/en/business/2026/03/brazil-approves-law-banning-infinite-scroll-and-video-autoplay-for-children-on-social-media.shtml>

2026년
4호

KPF 미디어브리프

K P F M e d i a B r i e f W e b z i n e

발행인 김효재

편집인 임석규

기 획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발행일 2026년 4월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3층

전화 (02) 2001-7743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

편집 (주)나눔커뮤니케이션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 교평빌딩 304호

전화 (02) 333-7136 팩스 (02) 333-7146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26

〈KPF미디어브리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